

#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의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

황석연  
행정안전부 주민참여협업과 서기관

##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의 목표와 방향, 성과

2021년 합계출산율\* 0.81. 대한민국의 인구절벽 상황을 이처럼 간명하게 보여주는 수치는 없다. 결혼해서 아이를 한 명도 채 낳지 않는다는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안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다. 2020년에는 주민등록 인구통계 역사상 처음으로 출생자(27만 5,815명)보다 사망자(30만 7,764명)가 더 많은 ‘데드-크로스(Dead-Cross)’가 발생해 인구 증가율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인구의 지역 간 이동을 보여주는 사회적 인구이동의 결과를 보면 더욱 답이 보이지 않는다. 수도권 인구비율이 지난 2019년 사상 처음으로 50%(2,592만 5,799명)를 넘은 데 이어 2021년에는 50.39%(2,602만 3,283명)로 지방의 인구수를 추월했다.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 보면 인구문제의 발생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지방의 합계출산율\*\*이 수도권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는 증가추세에 놓여 있고 지방의 인구는 역설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청년들이 아이를 낳고 살아도 머지않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으로 떠나기 때문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소득과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된 탓이다. 반면에 수도권에서 돈을 벌어도 주거와 교통, 식자재 구입 등 생활비가 많이 들어 삶은 팍팍하기만 하다. 수도권 청년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

\* 15-49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의 평균

\*\* 2021년 지방도시의 합계출산율은 세종특별자치시 1.28, 전남 1.02, 강원 0.98 등으로 서울 0.63, 부산 0.73에 비해 2배 가까이 높다.

기 위해 주택을 구입하려고 해도 소득에 비해 주택 구입비\*가 더 빠르게 상승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주택구입에 20년이 넘게 소요된다.

인구밀도가 높고 삶은 팍팍한데 이런 수도권에 청년들이 모여드니 자연스레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고 그나마 출생자 수도 적다. 합계출산율 0.81이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이다.

더 늦기 전에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청년 문제와 인구절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사회문제 해결과제로 채택\*\* 되면서 2018년 처음으로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이 지역활력 제고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전국 단위 공모사업\*\*\*으로 전라남도 목포에서 처음 시작된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은 저출생과 사회적 인구이동으로 지방소멸의 위험에 처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청년을 발굴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의 사라져 가는 자원을 활용해 가치 있고 창의적인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에 장기적으로 정착하면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획된 정책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지역을 살리는 청년의 발굴

청년마을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친 자료는 일본의 ‘마스다 보고서’\*\*\*\*다. 마스다 히로야(増田寛也) 전 일본 총무상이 주장한 ‘소멸 가능성 도시’ 지표에 따르면, 20~39세 이하의 여성인구 수를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비율이 0.5 미만이면 30년 이내에 그 지방이 소멸할 것으로 보았다. 이는 일본 전체 시구정촌의 49.8%(896개)에 달하는 높은 수치여서 고령화 사회 일본에 큰 충격을 주었다.

\*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서울의 연소득 대비 주택 구매가격 비율(PIR)은 중간수준 3분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1로 나타났다. 즉 서울에서 중산층이 20.1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해당 지역의 중간 가격 수준의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다.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회문제 해결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조직으로 사회혁신추진단이 행정안전부에 설치됐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참여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가 실시돼 지방소멸 대응과제로 쇠퇴한 지역공간을 민간의 참여로 활성화하는 사업이 시작됐다.

\*\*\* 2018년 시작된 국민참여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가운데 지방소멸 대응과제는 ‘민간참여공간 활성화’ 사업으로 전국에서 민간주체를 발굴하기 위한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됐는데 (주)0장0장 등 10개 팀이 응모해 원도심 활성화를 제안한 목포시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 2014년 5월 일본에서 발간된 보고서로, 마스다 히로야 전 총무상이 이끄는 일본창성회의가 낸 일명 ‘마스다 보고서’다. 현재의 인구감소 추세대로라면 2040년까지 일본의 절반, 896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된다는 경고를 담았다. 이 내용을 정리한 책 <지방소멸>은 한국에서도 출간돼 있다.

우리도 고용정보원(2020)에서 같은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2013년 75개에서 2020년에는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105개가 지방소멸 위험에 처할 것으로 분석됐다.

마스다 보고서가 이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목한 것은 바로 청년인구였다. 특히 젊은 여성인구가 지역생존의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처음으로 밝혀냈다. 인구가 감소해 소멸위험에 처한 지역은 청년인구, 특히 출산이 가능한 젊은 여성인구를 적극 유치해야 하고, 이들에게 지역에서 장기 거주가 가능한 일자리와 주거환경 및 자녀교육 환경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도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면서, 우리보다 먼저 인구감소 문제를 겪은 일본에서 ‘지역부흥대’와 같은, 청년을 지역에 유치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은 사례들을 먼저 살펴보았다. 더불어 ICT 기업의 위성사무실을 유치해 청년인구 늘리기에 성공한 일본 도쿠시마(徳島)현 가미야마(神山)정의 ‘그린벨리’와 시마네(島根)현 아마(海士)정의 ‘자립촉진 플랜’처럼 청년들이 찾아와 기존 주민과 하나되는, 즉 활력 넘치는 커뮤니티를 조성해 소멸위험에 처한 지역들이 활력을 되찾은 사례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런 사례연구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지역에 정착하려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한 사업은 크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청년공동체지원 사업,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2018년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일본의 지역부흥대처럼 지역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면 지역의 기업에 2년간 급여를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일종의 씨앗기 사업인 청년공동체지원사업은 지역으로 이주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보다는 지역을 떠나지 않고 남아 있는 청년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들이 지역활동을 통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창업 등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1년 11개 시·도 100개 팀 지원에서 2022년에는 15개 시·도 140개 팀 지원으로 사업이 크게 확장됐다.

이 글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은 인구감소 지역과 이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하는 청년들을 연결하는 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유형

구분	지역정착지원형	창업 투자 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연계형	지역 포스트코로나 대응형
의의	지역 기업에 청년을 매칭하여 일자리 창출, 지역정착 유도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 지원 및 고용 친화적 생태계 조성	공공·민간 부문 다양한 일 경험을 통해 민간 취업 연계	비대면·디지털 영역에서 일 경험 및 전문교육을 통해 청년의 역량 향상
취창업 분야	마을기업, 농업법인, 중소기업 등 지역 기반 법인·단체	신규 창업 및 민간기업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	지역사회 서비스 분야 등(예: 미술관 큐레이터, LPG 점검)	비대면 디지털 분야(예: AR/VR, AI, ICT 등 디지털 분야 직무)
지원 기간	2+1년(3년 차 취·창업 시 추가지원)	2년간(취·창업 지원)	1년 이내(일 경험 후 민간 취·창업 연계)	1년 이내(비대면 디지털 분야 일 경험 및 전문교육 후 취·창업 연계)
지원 내용	인건비, 직무교육비 등	취·창업 지원: 인건비 외 (교육비, 임대료 등)	인건비, 직무교육비, 자격증 취득비용 등	인건비, 직무교육비 등

\* (2018~2021년) 한시 사업으로 추진(2021년 예산: 2,350억 원)  
 - 참여인원: (2018년)1.1만 명, (2019년)3.6만 명, (2020년)3.6만 명, (2021년)2.6만 명(목표)  
 \* 추진 일정: 사업공모(2020.10), 심사 선정(2020.12), 사업추진(2021.1.12), 성과분석(2021.12.)  
 출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4차 기본계획(2022)에 따른 행정안전부 실행계획

업으로, 인구 유입과 지속가능한 정착을 위한 지역활력 제고에 방점이 찍힌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은 2018년에 처음 시작됐다. 원도심 쇠퇴 지역인 목포 만호동 일대에 등지를 튼 ‘괜찮아마을’ 청년들로 하여금 실패해도 괜찮은 또래 청년들을 초대해 지역살이를 경험하게 하고 지역 축제와 섬 전문 잡지를 발간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살이 열풍을 몰고 온 (주)장0장이 첫 주자로 나섰다. 이후 2019년 인구감소 지역인 충남 서천군에 ‘삶기술학교’가 세워져 청년들의 지역살이 열풍을 이어갔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창궐하기 시작한 2020년에는 인구감소 지역인 경상북도 문경시에 ‘달빛탐사대’라고 이름 붙은 지역청년 중심의 지역살이 실험이 진행돼 80명이 넘는 청년들이 지역을 누비며 지역정착 가능성을 타진했다.

청년마을 주요 성과(당해연도 말 기준)

구분	참여인원	정착인원	공간활용	교류행사
(2018년) 목포 괜찮아마을	60명	32명	3개소	3,457명
(2019년) 서천 삶기술학교	93명	47명	13개소	5,000여 명
(2020년) 문경 달빛탐사대	84명	31명	16개소	759명

- 한산소곡주 등 지역 전통산업의 현대화(소곡토닉)로 지역주민과 도시청년 간 연대성을 구축하고,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유 및 거주공간 조성
- 2021년 기준 176명의 청년이 삶기술학교에 입학해 그중 35.8%(63명)의 청년이 지역에 정착했고, 프로그램 참여인원은 약 5,500명에 달함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은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사업에 참여한 청년, 지역 유휴공간 활용, 교류행사 등 각종 지역탐색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3개년에 걸친 청년마을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

### 청년마을 확대와 지역활력 제고

2021년은 청년마을의 중흥기가 시작된 첫 해라고 볼 수 있다. 해마다 1곳씩 선정돼 시범실시의 성격이 강했던 청년마을이 2021년부터 한 해 12곳\*으로 대폭 확대됐기 때문이다. 청년마을이 확대된 데에는 우선 인구감소 지역이 대폭 늘어나 지역불균형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세대 간 갈등의 여파로 공정이 큰 화두가 된 가운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 불안정 등이 사회문제로 제기되면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도 청년마을이 확대된 배경 중 하나이다. 때마침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설치되고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청년의 참여와 권리가 더욱 강조됐으며,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이 청년기본법 시행계획에 반영되면서 청년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청년마을의 이런 성장에는 독특한 사업구조도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 가장 큰 특징은 사업의 기획과 예산집행의 권한, 즉 주도권을 청년들에

\* 2021년 최종 선정된 사업지는 부산 동구(초량동), 인천 강화군(강화읍), 울산 울주군(상북면), 강원 강릉시(중앙동), 충북 괴산군(감물면), 충남 공주시(중학동), 충남 청양군(청양읍), 전북 완주군(고산면), 전남 신안군(안좌면), 경북 상주시(남원동), 경북 영덕군(영해면), 경남 거제시(장승포동) 이상 12 곳으로 공모사업에 전국 144개 팀이 지원해 12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 청년의 권리와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과 청년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안으로 2020년 1월 9일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그해 8월 5일부터 시행됐다. 청년의 범위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게 부여한다는 점이다. 청년마을 1곳당 5억 원의 사업비가 직접 교부되고, 그 집행도 교부금이 아닌 일반용역 예산으로 편성해 애초 약속된 사업의 성과 위주로 결산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행정편의를 도모했다.

지역살이 장소 선택도 자유롭다. 청년들이 살고 싶고 일하고 싶은 지역을 직접 선택해 행정안전부에 제안하는 방식이어서 청년들의 선택권을 더욱 강화했다. 고용도 자유롭다. 기존 사업들의 경우 지자체나 기업을 통한 우회적인 지원인 데 반해 청년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재정집행의 권한을 직접 행사함으로써 청년이 중장년을 고용하는 방식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청년의 시각으로 지역자원을 새롭게 살펴보고 실패해도 용인되는 과감한 지역정착 실험이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고자 했다.

세 번째 특징은 다부처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살이 실험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또래 청년들을 자신이 살고 싶은 지역에 초대해 공동체를 형성하고 주거와 공유사무실을 구축하고 나면 지자체와 다른 부처의 지원사업을 연결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받게 된다. 별도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청년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해 서로의 자원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체를 구성하고 지원하는 방식이다.

2022년부터는 새로 뽑히는 청년마을을 대상으로 단일 연도 예산지원 방식을 탈피해 3년간 6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좀 더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이런 방식으로 2025년까지 해마다 12곳의 청년마을을 지속적으로 선정하고 연대를 강화한 후속 지원사업을 통해 2021년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인구감소 지역 89곳\* 모두에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청년조직을 결성하고 공동체로 성장시켜 나가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았다. 인구감소 지역에서 청년들이 주도하는 지역활력 제고 사업으로 본격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 정부가 지역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0월 18일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은 경기도 가평군 등 전국 89곳으로 인구증감률, 고령화비율, 조출생률 등 8개 지표를 활용해 종합 선정했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향후 지자체 스스로 인구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지방소멸대응 기금 등 국고보조사업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하게 된다.

수도권으로 향하는 청년들의 발걸음을 지방으로 돌려 지역자원에 눈뜨게 하고 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시도케 함으로써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청년마을이 인구감소 시대 대한민국에 던진 희망의 메시지를 분명하고 간결하다. 그것은 ‘지역에서 충분히 행복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제 문제는 지속가능성이다. 지역으로 향하는 청년들의 발길이 일시적인 유행에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문화로 자리 잡으려면 우리 사회가 이들 청년에게 어떤 토양을 제공해야 할까?

### 신인류의 등장

“기후위기 시대에 30년 뒤 지구의 운명은 10대들이 결정해야 한다”며 학업을 중단하고 탈탄소 사회를 주장하고 나선 스웨덴의 기후환경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처럼 새로운 인류가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기성세대와 고민을 달리하고 삶의 방식도 다른 ‘신인류’라고 부를 수 있다.

청년마을은 이런 신인류, 지역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 청년 세대를 발견해 내고 응원하는 사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지역과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기성세대와 다른 이들에게 권한을 넘겨주고 이들의 시각에서 지역사회를 새롭게 재해석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도권을 넘겨준다는 측면에서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은 지역혁신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2018년 시작돼 5년 차에 접어든 청년마을이 새롭게 정의된다면 ‘신인류가 만들어 가는 새로운 지역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청년들이 충북 괴산군의 논두렁에 만든 농부학교 ‘뫼하농’에서 자라는 작물은 표고 버섯과 감자, 옥수수뿐만이 아니다. 나비와 반딧불이를 키워 지역 아이들이 보고 함께 성장하도록 돕는다.

오징어와 잡어를 잡아 생계를 꾸려가던 경상북도 영덕군 작은 어촌의 ‘뚜벅이마을’에 모인 청년들은 전국에서 찾아온 청년들과 함께 해안을 따라 해양쓰레기를 치우며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간다. 전라남도 신안군 팔금도의 섬마을 폐교에는 거북이와 앵무새가 사는 동물원이 만들어지고, 젊은 청년 작가들의 판타지 예술촌 ‘주섬주섬 마을’이 들어섰

다. 1,500년 된 백제의 고도 충남 서천 한산면에서는 ‘삶기술학교’ 청년들이 소곡주를 새로 포장해 와인이나 위스키와 견줄 만한 세계적인 상품으로 다시 탄생시켜 노인들이 명맥을 근근이 유지해 오던 지역 전통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렇게 청년들과 청년마을은 상상력 넘치는 새로운 스토리를 지역 안에서, 지역과 함께 써 내려가고 있다.

### 지역산업과 함께 성장하기

지역에서 청년들이 오래 머물고 소득을 창출하며 살아가려면 지역산업과 함께 성장해야 한다. 지역에서 청년들이 갈 만한 괜찮은 일자리는 지역산업이 발전하는 가운데 만들어지고 유지될 수 있으며, 지역산업은 청년들이 있어야 개선되고 혁신될 수 있다. 지역자원을 활용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면 금상첨화이겠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기존의 오래된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값어치가 있을 것이다.

밀짚모자 제조로 유명한 이탈리아 몬타포네(Montappone)는 인구 1,700명이 사는 작은 마을이지만 1년에 약 6,000만 개의 모자를 제조해 2,0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세계 패션산업의 아이콘이 됐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화과자나 그리스의 올리브 오일처럼 단일 품목만으로도 세계인이 즐겨 찾는 소중한 미래산업을 지역에서 만들 수 있다.

1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충남 금산의 인삼 산업이나 강경의 젓갈 산업도 청년들이 지역에서 새롭게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전통산업이다. 유럽에서 배워 온 제빵 기술을 활용해 남녘 바다 섬마을에 세계적인 관광산업을 일으킬 힘도 청년들에게 있다.

금동대향로를 만들어 낸 백제 장인들의 후예답게 청년들이 전북 익산에서 귀금속 산업을 일으킬 수도 있고, 넷플릭스를 통해 한류돌풍을 일으킨 K-드라마가 웹툰을 소재로 한 것처럼 청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머금고 웹툰 작가들이 만들어 가는 청년마을이 전남이나 경남의 오래된 시골마을에서 다시 태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청년마을과 오래되고 낡은, 때로는 잊힌 지역산업을 연결해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인구감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만 있다면 한국은 스위스나 이탈리아처럼 작지만 강한 콘텐츠 산업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이 될 수도 있다.



**지역의 유휴공간,  
지역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발굴 등  
인구감소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마을이 아닌 낯선 지역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가족을 이뤄 살아나가려면 일자리와 주거가 지원돼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지역 청년들을 받아들여려는 지역 사람들의 환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청년마을의 성공 여부는 지역주민의 환대문화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환대의 시작은 ‘여지(餘地)’를 주는 것이다. 여지(餘地)란 한자를 풀어쓰면 남은 땅을 내어주는 것이다. 지역에서 사용하지 않는 땅을 빌려주어 농사를 짓게 하고, 빈집과 빈방을 내어주어 잠잘 곳을 해결케 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권한을 주어야 한다. 예산을 함께 나눠 쓰게 하고 무엇보다 새로운 생각과 견해를 받아들여 새로운 시도가 가능하도록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년마을은 이런 기본적인 환대와 유휴공간의 제공, 지역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정책의 총아라고 할 수 있다. 2019년 충남 서천군에 만들어진 청년마을 삶기술학교가 그 좋은 본보기다.

청년들의 앵커공간으로 쓰이는 ‘노란달팽이’와 ‘한산한 오늘’이란 사무공간은 지역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내어준 경우이며, ‘그림한담’은 비어 있던 가게를 지역에 내려온 청년에게 내어주어 예술가의 갤러리로 쓰게 한 사례다. 외지에서 들어온 청년들에게 비어 있던 집과 가게를 내어줌으로써 죽은 공간이 살아나고, 이 공간을 통해 일 자리를 만든 청년들이 지역을 활보하자 24시간 편의점이 새롭게 문을 여는 등 지역에 활력이 되살아났다. 청년들은 이 지역 전통주인 소곡주를 재포장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고를 높이기 시작했고, 상인들이 사라져 오래전 문을 닫은 여관을 개조해 지역 호텔인 ‘호텔-H’를 새롭게 열었다. 이곳은 전국의 청년들이 묵고가는 교류의 장으로도 쓰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버려진 공간을 살리려는 이런 청년들과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호텔-H’를 만들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민자산화 사업’을 통해 민간의 유휴공간 개선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을 통해 공공의 유휴공간을 시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충남 서천군 한산면에 청년들이 일하면서 쉬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디지털노마드 센터’가 문을 열었다.

특히 한산 소곡주처럼 청년들이 지역자원을 재해석해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비롯해 청년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중소기업벤처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추진하고 있다.

지역이 살아나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주거공간도 있어야 한다. 학교와 병원도 있어야 한다. 이런 지역활력 제고 사업의 중심에 문제해결의 당사자인 주민이 있어야 하고, 특히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는 그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젊은 청년들이 등지를 틀고 살아가야 한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본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함으로써 이들 신인류가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따지지 않고 지원하는 용기, 이런 용기가 지속될 수 있다면 청년마을은 인구감소 시대에 지역의 미래를 열어갈 소중한 정책사업이 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황광훈. (2021). 지역별 청년노동시장 동향 및 일자리질 비교. 한국고용정보원.
- 2 배규식. (2022). 지역소기업/자영업자 혁신을 통한 노동시장의 격차 축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3 간다 세이지. (2020). 마을의 진화: 산골 마을 가미아마에서 만난 미래. 반비.
- 4 박소영. (2019). 지역활성화를 위한 국·공유 유휴공간 민간활용 제고 방안. 국토연구원.
- 5 마강래. (2017). 지방도시 살생부. 개마고원.
- 6 마스다 히로야. (2015). 지방소멸: 인구감소로 연쇄붕괴하는 도시와 지방의 생존전략. 와이즈베리.